

## IMF체제와 건설업의 진로

- 3고 시대에 따른 건설업의 자구책 -

Renovation of IMF & Ahead of Construction Profession

### 목 차

1. IMF 신드롬
2. 오늘의 기업여건
3. 건설업의 여건과 전망
4. 건설업의 자구책



李 鶴 榮\*  
Lee, Hak Young

### 1. IMF 신드롬

'97년 말 밀어닥친 IMF(국제 통화기금) 한파가 시작된지 4개월이 지난 현재, 국내 경기는 불황의 늪에서 중증의 IMF 신드롬에 빠져있다.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경제용어 까지도 이제는 자신의 이해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감하면서, 국민들은 매일의 긴장과, 위축된 생활 속에서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원인이야 어떠하든, 외환부족으로 인한 구제금융으로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기업들은 신

규차입은 물론, 기 대출금의 만기연장도 어려워지고, 고금리로 인한 기업들의 도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필자의 좁은 식견으로는 우리 경제의 이와 같은 좌초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여러 해 전부터 시름시름 중병으로 앓고 있음을 계속된 불경기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우리의 병든 경제를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과 신뢰성 있는 정책이 뒤따르고, 불신이 해소되어야 건설한 경제로 회복될텐데,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간 데 없고, 인기위주의 돌팔이 의사들만

\*건축시공기술사, 극동건설 ENG. 사업본부/감리팀 상무이사, 본회 홍보위원.

building engine

명의인양 활개를 치다 우리의 경제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정경유착, 매년의 임금인상을 위한 노동쟁의, 민생에는 소홀한채 당리당락만을 일삼는 위정자들, 물지각한 사치풍조, 무절제한 해외여행과 도피성 해외유학, 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 차입과 해외 투자 등, 모두들 나라가 망하는 길에 촉매 역할을 했으며, 이제 병든 경제는 실기(失期)한 환자 같이 되었다.

## 2. 오늘의 기업어건

개인이 부도가 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법에 따라 강제 집행하여 채무를 변제시키던가, 아니면 채권의 확보나 원금을 받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채무자를 희생시켜, 채권을 확보하듯이, 국가도 부도위기나 채무 불능상태에 봉착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국이나, IMF는 채무국가의 희생과 채무이행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하여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채무국의 부도를 막아줌과 동시에 채권국은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그 자체를 우리는 부정적 시각으로나 배타적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IMF가 제시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싫든 좋든 이행하여야 하는 입장에 처하였고, 옛날의 관행과 유착들의 고리가 서서히 끊어지니, 기업의 자금 사정은 극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금리는 고금리가 되었고, 외환이 고갈되어 달러가 강세이니 고회환을 시대에 접어들었다.

또한 불경기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은 현실로 다가와 대량실업 즉 고실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3고 진통에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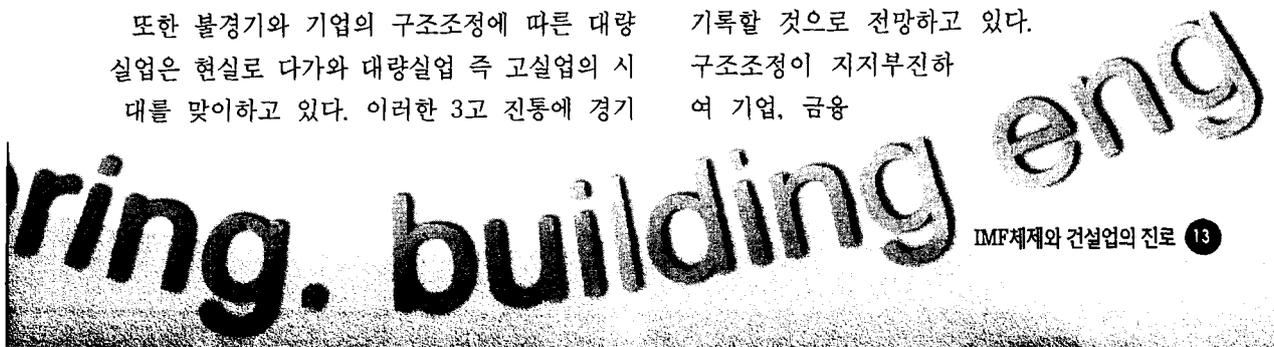
는 부득이 하향조정이 불가피하여 저성장은 계속 될 것이고, 개발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주난과, 매출의 자연감소는 불가피 할 것이다.

지난 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중 산업동향” 자료에 의하면 실직자는 '97년 1월에 55만 명에서 1년 후인 '98년 1월에 93만명, 2월엔 100만명을 돌파하고 있으므로 1년 사이에 2배 이상 실직자가 발생하였고, 이것은 4인 가족 10가구당 1가구가 실직 가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은행의 “1월중 어음 부도율 동향” 자료에 의하면 '97년 1월에 1,115개 업체가 부도났으나 '98년 1월까지 3,323개로 늘어나 부도로 도산된 회사가 연간 3배나 늘어났다.

우리경제의 주역이었던 기업들이 이렇게 빚더미의 괴물로 도산되고,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된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으로 세계시장에 싼 상품을 팔았고, 설비의 과잉투자과 동종 국내 기업간의 제살 깎아 먹기식의 과잉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부동산 투기, 금융권의 비정상적 외채운영, 문어발식 확장에 혈안이 된 그중착역은 운명 처럼 이미 예견되었으며, 나라의 끝은 장기적 불경기에 의한 고갈로 국가는 부도위기에 봉착하였다. 정의롭게 일한 국민과 3D를 극복한 기능공들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웃음 잃은 국민정서의 대가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한국 개발연구원, 삼성, 대우, LG 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구제금융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구조조정이 낙관적인 경우 2년 전후가 필요하며, 올해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여 기업, 금융



권의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외국인의 투자유입이 잘 되지 않으면 금년 성장률은 -2%, 1인당 GNP 만불 시대에서 6천내지 7천불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제 기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성장보다는 건축경영으로 기업의 사활(死活)을 놓고, 혁신과 의식개혁을 과감히 시도해야 한다.

### 3. 건설업의 여건과 전망

멕시코의 경우 1995년 2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제조업 지수는 전년대비 4.8% 감소 한데 반하여 건설업 지수는 전년대비 23.5%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4배 이상 감소치를 보이는 것은 건설업이 그만큼 구제금융 체제하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저성장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건설업체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470% 정도가 되며, 안정성이 없는 부실기업들이 허다하여 금년 내에 40대 건설업체 중 약 50%가 도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건설의 채산성은 악화되어, 전문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은 약 4%만이 손익을 맞추고 있으며, 나머지 96%는 손해를 보고있는 실정이나 이러한 취약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그러한 현상들은 부실 공사의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고, 추락한 건설의 명예 회복은 더욱 요원하여 질 것이다.

최근에 건설공사 발주 또한 줄어들자, 건설업체들은 일감 확보를 위해 공공 공사에서 잇따라 저가 수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조달청 등에 따르면 서해안 고속도로(군산-

무안), 중부 내륙고속도로(여주-구미) 등 2개 구간 총 13개 공구에 대해 입찰한 결과 3개공구의 10여개 공구의 낙찰가격은 예정가의 70~80%선 이었고, 서해안 일부 공구에서는 예정가의 70~76%선이었다. 이처럼 덤핑 입찰이 잦아지고 있는 것은 최근 불경기 한파로 민간부문의 발주감소, 재정긴축과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축소 등으로 인한 공공공사 발주마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고 현상 속에서, 아파트 분양업체들은 대출금리의 폭등으로 인한, 아파트 당첨자들의 계약포기 및 중도금 불입기피 현상으로 자금은 더욱 경색되었으며, '98년 1/4분기에 벌써 전자재 가격은 이미 인상되어, 목재가 2배 이상, 알루미늄 세시가 70%, 철근이 30%나 상승하여 시장에 민감한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파트의 공급축소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실례로, 지난 1월 17일 마감된 서울시 10차 동시분양(6개지구 1,000여가구) 청약접수 마감 결과 청약자가 전체 가구수의 절반정도인 508가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19일 계약을 마감한 9차 동시분양(12개 아파트 3,800가구)의 계약율도 50%이하의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기업과 건설 환경의 여건은 극히 불안하고 장기불황을 감안할 때, 수주난과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사업 전망은 안개 속에 갇혀 예보가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 4. 건설업의 자구책

건설은 재생산(Re-Production)과정을 거쳐야

하는 복합적인 투자로, 이것은 사람, 돈, 자재, 장비가 투입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 사업이며, 투자규모가 큰 사업이므로 건설의 구조조정은 분기간, 연간 이루어져야 하고, 때로는 프로젝트 별로 경영에 반영 되어야하는 것으로 제조업보다는 기동성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건설업에 대한 경영전망”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을 위시한 10개사의 사장 인터뷰 보도를 분석 하여보면, 대체적으로 현금의 유동성 확보, 조직의 정비, 품질경쟁력 확보, 기술력 배양, 성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건축경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종이 그렇게 고비용, 저효율에 시달려 오면서, 수익성 저하와 건설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관련자들의 재교육 및 보호육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미흡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기술력 배양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기술개발이나 신공법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기업이 별로 없는 것은 장기적 건설발전이나 국제 경쟁력에서는 일보 후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가시적인 건축과 인원감축, 그리고 기구 축소만이 어려운 경제와 건설구조를 풀어 나가는 유일한 길로, 기술개발이나, 소프트 개발에 종사하는 두뇌들을 경비절감에서 우선 감원 대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건설의 앞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러한 여건에서 건설업체의 바람직한 진로와 구조조정은 어떤 것일까.

**■ 제 1. 경영체제를 슬림화하여 구조를 재편성하는데 기동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업은 체면과 형식에 뿌리를 두고 있

지만, 불요불급한 요소들은 과감히 제거하여, 몸집을 가볍게 하고, 기동력을 길러야 한다. 무분별한 과잉투자과 문어발식 확장이 가져오는 폐해는 건설분야도 예외 일 수 없다.

계열회사는 상호 보완성을 갖는 유사한 전문 계열 이어야 할 것이며, 건설업이 “유통업, 제조업, 레저산업에까지...”하는 식은 이제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현재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개혁(Re-form)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더욱 확실하게 유지시키겠다는 다짐(Re-confirm)인 것” 같다고 비쳐지는 외신의 보도는 우리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걸치레에 불과한 요식으로 보고 있으며, 기업의 개혁의지는 상징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제 2. 생산성(Productivity)을 향상시켜 원가 절감에 사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연간 인당 소화액을 배로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사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많은 이해의 대립과 사용자의 횡포로 인한 노사분규는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면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제는 고용이 안정되어 나라가 있어야 회사가 있고, 회사가 있어야 개인이 존재한다는 평범한 인식이 깊이 자리 잡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1인 2역을 해야 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노사 합심하여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 제 3. 건설업을 전문서비스 분야로 성장시키고, 건설발전을 위하여 재투자되어야 한다.**

건설에서 발생된 이윤은 건설에 투자하여 건

설발전의 재창출이 이루어지도록, 과감한 투자와 개혁이 필요하고, 건설은 안전에 바탕을 둔 질(質)의 경영과 기술개발을 시도하여, 이러한 투자가 휘드 백(Feed Back)되는 경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단순시공에서 벗어나 C.M(Construction Management) 부문 쪽으로 영역방향을 개선하여 서비스 분야의 체제를 한층더 강화하고, 수주패턴도 턴키 베이스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시도하여야 한다.

**경쟁력강화는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지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시장개방 제2차년을 맞고있는 국내건설은 해외에 눈을 돌리고, 시장개척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이미 국내건설 시장에 투입된 외국의 기술 용역들을 살펴보면, 영국의 RPT와 모크 맥도널드 리미트사는 성수대교 복구공사와 가양대교에, 미국의 벡텔사와 서전트 앤드 런던사가 원전건설에 투입되었고, 프랑스의 소시트누벨르사 및

소프레가즈사는 LNG기지 건설공사의 관련업무를 맡고있는 실정이다.

시장개방 이후 감리와 설계분야에선 우리의 시장은 이미 잠식되었으며, 앞으로 건설기술 분야에 외국사들의 공략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고, 우리건설의 관리능력은 외국 보다 50%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시공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잠식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국내시장이 계속 개방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시급히 국제 경쟁력을 길러 국내시장이나 해외건설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새 정부는 국내의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데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므로써, 여러 기간산업이 새로 재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우리의 건설업체들이 능동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온갖 행정력을 동원하는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원고접수일 1998. 3. 10)